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안 번호	2043
----------	------

발의연월일 : 2020년 5월 일

발의자 : 정병용 의원

1.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 나.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 라. 예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마.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바.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5.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기간 : 2020년 5월 18일 ~ 5월 25일(7일)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7. 부서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

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

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5. “폭염민감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하남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2. 폭염 대응 계획
3.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민감계층 지원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폭염저감조치 사업

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민감계층 보호 사업

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권고 등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용품

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그 밖에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3조 관련)

폭염저감시설	정 의
쿨 루 프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 또는 옥상에 시공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저감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도시온도 저감 기법을 말한다.
쿨링포그 시 스템	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3~5℃ 낮춰주는 신개념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 열 성 도로포장	태양열이 포장체에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 및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포장체 내에 포함하거나 포장체 상면에 코팅하여 포장면의 열흡수를 방지하여 온도를 낮추는 포장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	주요 도로변 및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텐트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 도 나무그늘 만 들 기	폭염 시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시설	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

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